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

윤승준*

- I. 서언
- II. 정부 수립 이전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
- III. 정부 수립 이후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
- IV. 결론

■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데,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은 실상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일반교육’의 보급을 강조하면서 대학 교육과정에 ‘일반 교양과목’이라는 범주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1공화국은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을 제정, 공포하는 등 교육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 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 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의 통제와 육성 이 근간을 이루었다. 1973년 도입된 실험대학 제도와 「교육법시행령」(1973.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yoonsj@dankook.ac.kr

4.20.) 제119조 ③항은 대학 교양교육의 취지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제도와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고 1970년대 중반 각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부서가 폐지되면서 이후 교양교육은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대학 교육과정의 ‘교양’과 ‘전공’의 이원 구조로 바뀌었으며,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두어 이수하게 하였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국책교양’의 폐지 등 「대학자율화 세부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교양교육을 각 단과대학에 위임함에 따라 교양교육의 전공 종속화를 초래하였다. 대학 자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③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양교육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 또한 ‘5·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시행된 학부제는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위로부터의 개혁,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강제적인 학과 통폐합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대학 자율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여기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설립되고, 한국교양교육학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출범하면서 한국의 교양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또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근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정부 수립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부의 통제와 육성, 자율화 등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 속에서 많은 굴곡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기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양교육, 고등교육 정책, 교양교육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실험대학, 대학 자율화

I. 서언

1990년대까지 한국 대학의 역사를 ‘대학과 권력’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역사는 일제부터 미군정까지 외세라는 타자적 권력이 주도했던 대학의 탄생 과정, 1950년대 국가의 방임 속에 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 권력의 성장 과정, 1960년대와 1970년대 근대화 정책을 앞세운 국가 권력이 대학 교육 전반을 장악해가는 과정,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보편화, 그리고 민주화와 함께 진행된 대학에 대한 시장 권력의 확대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정인, 2018, 4-5) ‘외세’와 ‘사학’, ‘국가’, ‘기업’이 한국 대학의 탄생과 성장,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온 주축이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법과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온 권력이 국가 권력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한국 대학 역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은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에 대한 성찰은 현재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의 역사를 정부 수립 이전과 정부 수립 이후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수립 이전은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고, 정부 수립 이후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 또한 궤를 같이 해 왔다는 점에서 제1공화국(1948~1960), 제3·4공화국(1963~1979),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1~1993), 김영삼 정부(1993~1998), 김대중 정부 이후(1998~현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고등교육 정책에서 차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정부 수립 이전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

1. 일제 강점기(1910~1945)

- 억압적·폐쇄적 고등교육 정책과 경성제국대학 예과

일제 강점기의 고등교육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동화(同化)’와 ‘차별’이라는 2대 원칙에 입각한 「초등교육의 보급과 고등교육의 배제·억압」,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법문(法文)·의학계(醫學系) 교육의 선별적 허용과 정경(政經)·이공계(理工系) 교육의 억압」, 「민족 차별주의에 입각한 한국 국민의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 정책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김종철, 1988, 197)

일제는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그들의 식민지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갔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8.23.)에서 일제는 ‘충량(忠良)한 국민(國民)의 육성’과 ‘시의(時宜)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식민지 교육의 기본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일제는 일본어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고등교육을 억제하였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1922.2.4.)에 와서야 비로소 ‘대학 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조선에서도 비로소 대학 교육 및 그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24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예과(豫科)가 개설되고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추진했던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을 회유·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 관리들의 자녀들을 교육하지는 일거양득의 복안에 따른 것이었다.(김종철, 1988, 166~172; 이충우, 2013, 37~41) 당초 관립고등학교 설립안도 있었으나, 독립된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 예과를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 제도에 따를 경우 내지로부터의 입학 지원자가 쇄도하여 재조(在朝) 일본인의 입학난을 초래함으로써 조선에 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를 완수하기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때문이

었다.(아마노 아쿠오[天野郁夫], 2017, 64-65)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목표는 ‘국민도덕(國民道德)의 충실에 힘쓰는 것’이었다. 이같은 예과의 교육목표는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충량유위(忠良有爲)의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연성(鍊成)하는 것’으로, 다시 ‘황국(皇國)의 도(道)에 투철하여 동 대학 학부에 입학하려는 자에 대하여 정심(精深)한 정도로 고등보통교육(高等普通教育)을 베풀며 국가 유용(有用)의 인물을 연성하여 대학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과정은 ‘고등보통교육의 완성’과 ‘국민도덕의 충실’이라는 고등학교 교육의 2대 목적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특정 학부 진학을 위한 기초교육’이라는 또하나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우마코시 토오루 [馬越徹], 2000, 137 ; 최종철, 2007, 212)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과정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과 특정 학부 진학을 위한 기초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물론 제국대학의 외국어교육은 단순한 어학 교육이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근대 서구의 사상·문화·사회 등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아마노 이쿠오[天野郁夫], 2017, 90-91) 또한 특정 학부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문과 계열에서는 역사, 철학개론, 심리 및 논리, 법제 및 경제를, 이과 계열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식물 및 동물 등 기초수학 및 과학교육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이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교육에 치중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공과 관계없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폭넓게 교육하는 교양교육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육은 결국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과정으로 교양교육을 축소시켜 버린 것이었고, 그 결과 전공교육의 우위와 교양교육의 경시 풍조를 배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이정옥, 2015, 17-20)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이렇게 출발하였던 것이다.

[표 1]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과목의 주당 시수(1926)¹⁾

문과(文科)			이과(理科)		
학과목	1학년	2학년	학과목	1학년	2학년
수신	1	1	수신	1	1
국어 및 한문	5	5	국어 및 한문	2	
제1외국어	8	10	제1외국어	10	10
제2외국어	4	4	제2외국어	2	2
역사	4	4	라틴어		1
철학개론		3	수학	4	3
심리 및 논리	2	2	물리	3	5(강의3, 실험2)
법제 및 경제	2	2	화학	3	5(강의3, 실험2)
수학	2		식물 및 동물	3(강의2, 실험1)	4(강의2, 실험2)
자연과학	2		심리	2	
체조	3	3	도화	1	
			체조	3	3
계	33	34	계	34	34

2. 미군정기(1945~1948)

- 개방적·자유방임주의적 고등교육 정책과 일반교양과목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함께 찾아온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면서 군정(軍政)이 시작되었다. 1945년 9월 8일에 들어온 미군은 항복 문서 조항의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과 종교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군정을 시작하였으며, 38선 이남의 질서 유지와 자유독립국가 수립, 그것을 위한 일본 식민지 지배의 잔재 불식 등을 기본 방침으로 출범하였다.(이광호, 1983, 10~15; 김종철, 1998, 203)

1945년 9월 11일 군정청 산하 학무국이 설치되었으며, 학무국은 자문기관인 조선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와 조선교육심의회(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를 구성하여 교육 재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오늘날 고등교육의 기본 구조는 이 3년간의 미군정 기간 동

1) 『경성제국대학 예과일람』(1926, 41~42)에 제시된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과과정표’를 『교양교육 60년사』(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8, 14)에서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임.

안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 복선형의 기존 학제가 단선형으로 정비되면서 대학과 전문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으로 단일화되었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그동안 억눌렸던 교육열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제 잔재의 청산, 정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 종합대학의 교육적 이점, 학교 운영에서의 패권주의 극복을 위하여 관공립 고등교육기관의 통합도 추진되었다.(강명숙, 2002, 11~122)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 정책은 실상 조선의 자립보다 미국의 안정과 국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그 결과 광복 후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자주’와 ‘민족’이라는 두 가지 이념 가운데 ‘민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자문기관이었던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 의 구성원이 대부분 온건한 민족주의적 저항 노선을 견지했던 인사들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여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던 인사들로서 영어를 해독할 수 있는 기독교 계통의 신자들이나 정치적으로 한민당 관계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었다.(이광호, 1983, 15-27)

미군정은 교육을 공산화 방지와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통로로 삼았다. 조선을 자립시키면 어떠한 주의에도 감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을 조장하는 ‘일반교육’을 보급할 것을 강조하였다.(이광호, 1983, 17) 대학 교육과정에 ‘일반교양과목’이라는 교과목의 분류 범주가 이 시기 처음 도입된 것은 미국식 교육 체제의 도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전전(戰前) 파시즘의 융성은 대학 교육이 전공교육에 지나치게 편중하여 교양교육을 무시한 데 원인이 있었다는 미국교육사절단의 지적에 따라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던 당시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면,(강명숙, 2002, 133 ; 이정옥, 2015, 21~22) 일본의 교육제도를 준용하고 있었던 조선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을 것이며, ‘일반교양과목’이 대학의 필수과목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미군정은 대학의 교과목을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3분하고,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분류하였다. 국립서울대학교에서는 국어 및 국문학(8학점), 외국어 및 외국문학(8학점), 자연과학개론 혹은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 교과목(4학점), 문화사 혹은 문화 계통의 교과목(4학점), 체육(8학점) 등 총 28학점을 ‘일반교양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이 ‘일반교양과목’에 추가되어 국어(8학점), 문화사(4학점), 자연과학(4학점), 체육(8학점), 종교(9학점) 등 총 30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동아대학이나 중앙대학의 경우에는 당시 ‘일반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대학에 적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강명숙, 2002, 133~134) 당시 대학의 졸업학점이 180학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반교양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비율은 졸업학점 대비 15~16% 정도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선택과목’에 대한 최소 이수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점을 배분하였고, 전공교육 중심의 대학 교육 관행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교양 학점의 비율이 높을 수 없었다.

Ⅲ. 정부 수립 이후의 고등교육 정책과 교양교육

1. 제1공화국(1948~1960)

－ 「교육법」·「교육법시행령」과 교양교육의 기틀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5·10 선거를 거쳐 8월 15일 수립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민의 교육권’, ‘균등 교육’, ‘의무 교육’, ‘무상 교육’,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함으로 천명하였다.(정태수, 1995, 9)

제1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를 두고 미 군정청이 마련한 신(新) 교육제도를 계승하여 입법화하고 시행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 수립 후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31일, 교육기본법인 「교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교육의 목적과 방침, 6·3·3·4제의 학교제도와 교육자치제안 등을 담은 「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은 과거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지배에 따랐던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입헌국가의 법률 체계를 갖춘 교육법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안기성, 1999, 179)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법제인 「교육법」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을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법」 제108조의 내용은 고등교육의 목적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것이기도 하였다. 교양교육이 고등교육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학제의 법정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신생 국가의 교육제도는 그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교육법」 개정(1951. 3.30.)과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1951.4.4.) 발령, 「교육법시행령」(1952.4.23.) 제정을 통하여 교육의 중단을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에 제시된 대학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학의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하고, 필수과목은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일반교양과목이라 함은 일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각 학과의 전문학술연구상 필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한다. 일반교양과목은 다음 각 계열에 걸쳐 3과목 이상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문과학계(철학, 윤리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인문지리학, 인류학, 외국어), 사회과학계(헌법,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역사학, 인문지리학, 사회학, 통계학, 가정학), 자연과학계(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인류학, 가정학). 그리고 선택과목은 필수과목의 3분의 1 이내로 한

다. 일반교양과목은 필수과목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²⁾

기존에 특별한 제약 없이 개별 대학의 상황에 따라 일반교양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오던 대학은 위와 같은 「교육법시행령」 제125조 내용에 따라서 ‘일반교양과목’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계열의 교과목들을 폭넓게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더욱이 졸업학점 180학점 가운데 필수과목이 120학점, 선택과목이 60학점이었고, ‘일반교양과목’은 필수과목 가운데 3분의 1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마다 40학점 이내의 ‘일반교양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해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법시행령」은 전쟁 중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1년 후인 1953년 4월 24일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일반교양과목’의 조정이었다. 미군정기부터 ‘일반교양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 온 국어, 외국어, 체육, 문화사, 자연과학개론에 철학개론을 더한 6개 과목을 초급대학이나 대학 모두 ‘일반교양과목’으로 반드시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인문, 사회, 자연 각 계열에서도 1과목 이상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한 것이다.³⁾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6개의 필수 교과목을 지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선택적 필수 교과목의 수를 축소·조정한 것이 변경의 골자였다.

1954년 정부는 고등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180학점이었던 대학의 졸업학점을 160학점으로 감축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1955학년도부터 160학점 체제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 『한국교육십년사』(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1960, 151)에 수록된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의 내용을 한자 표기만 한글로 바꾸어 재인용한 것임.

3)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의 이수기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교육십년사』(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1960, 173) 참조.

[표 2] 서울대학교 교양교과목 및 학점수(1960)⁴⁾

구분	교양교과목	공대	농대	문리대	미대	법대	사대	상대
필수	국어	4	4	4	4	2	6	4
"	제1외국어(영어)	8	8	8	8	4	9	8
"	제2외국어	4	4	4	4	8	4	4
"	철학개론	4	4	4	4	4	3	4
"	문화사	2	4	4	4	4	4	2
"	자연과학개론	2	4	4	4	4	3	4
"	체육	2	2	2	2	2	2	4
선택	인문과학	6	2	2	4	4	교직	2
"	사회과학	2	2	2	4	4	"	4
"	자연과학	2	8	2	4	4	"	2
계		36	42	36	42	40	58	38

[표 3] 고려대학교 교양교과목 및 학점수(1961)⁵⁾

구분	교양교과목	법대	상대	문리대		농대	정경대
				문학부	이학부		
필수	국어	6	6	6	6	6	6
"	영어	12	12	8	12	8	8
"	제2외국어	8	8	8	8	4	8
"	철학개론	4	4	4	4	4	4
"	문화사	4	4	4	4	4	4
"	자연과학개론	4	4	4	4	4	4
"	체육	2	2	2	2	2	2
"	기타 교양필수선택	4	4	8	8	12	12
계		44	44	44	48	32	46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물론 이 시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철학개론, 문화사, 자연과학개론, 체육을 교양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였다.(이영덕 외, 1967, 54 ; 강무섭, 1976, 28-40)

이처럼 교양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4) 『서울대학교 요람 1959-60』(서울대학교, 1959, 63-173), 강무섭(1976, 31)에서 재인용.

5) 『고려대학교 일람 1961-62』(고려대학교, 1961, 57-121), 강무섭(1976, 33)에서 재인용.

하는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군정 당시 문리과대학으로 하여금 교양 교육을 담당하게 했던 서울대학교는 정부 수립과 함께 교양교육을 각 단과 대학에 분산, 이수케 하였으나, 경비의 낭비는 물론 교육적 효과의 저하가 매우 심각하였다. 그에 따라 1956년 1학기부터 문리과대학 내에 ‘교양과’를 설치하고 각 대학별 교양 과목을 지도하게 하였다. 문리과대학 내 ‘교양과’는 이듬해 5월 ‘교양과정부’로 승격되면서 부장과 교원, 사무직원을 두기에 이르렀으며, 교양 학점 가운데 21학점을 ‘교양과정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법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8, 34-38)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1956년 4월 ‘교양학부’를 설치하였다. 그 뒤 연세대학교 ‘교양학부’(1964)를 비롯하여 각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정부 수립 후 군정의 고등교육 정책을 이어받은 제1공화국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 1949년 「교육법」의 제정과 1952년 「교육법시행령」의 제정, 그리고 그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개정 과정을 통하여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 중심의 기존 대학 교육 체제 속에서 차츰 제 자리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의 대학은 사회적 혼란과 궁핍한 환경 속에서 양적 팽창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교양교육에 힘을 쏟을 여력은 없었다. 교양교육을 전담할 조직도, 교원도, 직원도, 교과목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등불 삼아 머나먼 항해를 시작한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교육 중심의 고등교육 풍토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시기는 한국 교양교육사에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제3·4공화국(1963~1980)

－ 군사정부의 대학정비와 실험대학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기로, ‘한강의 기

적’을 일구어낸 시기이다. 이 시기 대학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군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광복 이후 1960년까지의 고등교육 정책이 개방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인 것이었다면, 1960년대의 고등교육 정책은 통제 정책이었으며, 1970년대의 고등교육 정책은 육성과 통제를 병행한 개혁적인 것이었다고 평가된다.(김종철, 1988, 277)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을 공포하고, 「국·공립대학 정비 방안」(1961.9.5.)과 「사립대학 정비 기준」(1961.11.18.)을 연이어 공포하면서 대학정비를 단행하였다. 군사정부의 대학정비는 대학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표방했으나,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이형행, 1999, 14~16) 「사립학교법」(1963), 「대학학생정원령」과 「학위등록제」(1965), 대학입학예비고사(1968), 문교부와 사립대학에 대한 특별감사(1969), 「대학시설연도별보충기준령」과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령」(1970), 대학생에 대한 안보교육과 군사훈련 강화(1971) 등 대학에 대한 통제는 이 시기 고등교육정책의 주요한 기조 가운데 하나였다.(김종철, 1975, 25~27)

한편 정부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조성 정책을 통제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조성비의 제도화(1963), 사립대학 등록금 한도액의 폐지(1965), 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1966), IDA 차관 사업의 도입(1970), 실험대학의 도입(1973), 대학특성화정책(1974)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종철, 1975, 27~30) 그 중에서도 ‘실험대학’ 제도는 장단기 교육계획과 여러 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심포지움, 그리고 각 대학별 자체개혁안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핵심 내용은 졸업학점을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고, 계열별 모집을 실시하여 입학 후 1~2년간의 탐색과정을 거친 뒤에 전공학과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적성보다 성적 위주로 학과를 선택하던 현상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부전공제를 시행하여 졸업생의 취업 기회와 학문의 폭을 확대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복수전공제

의 실시,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른 학점 취득과 졸업기간의 단축, 계절학기의 운영 등도 추진되었다.

실험대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안목을 제공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특히 실험대학은 학문분야별 모형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했는데,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진리탐구의 학문적 태도를 지닌 인간 형성과 유능한 전문적 직업인의 양성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두 가지 이념을 조화 있게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한다. ② 학문의 계열에 기초한 광역형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전공 학과간의 장벽과 체계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필수과목의 감축과 선택과목의 확충을 통해서 학문 영역 간의 상호 개방을 꾀해야 한다. ④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⑤ 교양과목의 이수능 분산이수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⑥ 각 대학은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은 실험대학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음을 보여준다.(김종철, 1988, 289)

그러나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총 43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행했던 실험대학 제도는 교육내용의 합리화, 자율학습의 분위기와 도서관 시설의 확충을 포함한 여건의 조성, 교수의 책임 시수 감축과 연구 기회의 확충 등 인적·물적 조건을 충실히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됨으로써 결국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으로 평가된다.(김종철, 1988, 294-295 ; 김성혜, 2000, 13-15) 계열별 모집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보다는 재정난 완화에 더 무게를 둔 대학 운영, 특정 인기 학과 집중 현상, 자율화를 빙자한 경직된 운영 등을 실험대학의 실패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정혜령, 1999, 23-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대학에서 시행한 계열별 신입생 모집과 광역형 교육과정의 구성, 교양과목의 분산 이수 등은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교육법시행령」(1973.4.20. 대통령령 제6638호) 제119조 ③항에 “일반교양과목의 학점배정 기준은 전체 과목의 30%로 한다.”라고 졸업요구

학점 대비 교양이수학점의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교양교육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시기 대학의 교양학점은 졸업학점 140학점 가운데 평균 46학점(32.9%)을 차지하여 이전에 비해 그 비중이 더 커졌다.(강무섭, 1976, 68; 정혜령, 1999, 23) 그러나 대부분의 학점이 ‘국책교양’과 전공기초교육으로 채워짐으로써 교양교육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75년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은 국민윤리(2학점), 한국사(2학점), 체육(4학점), 교련(6학점), 국어(3학점), 외국어(9학점)를 필수로 하고, 단과대학별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균형 있게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 총 42~51학점을 이수하게 하였다. 1976년 고려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은 국어(6학점), 영어(9학점), 제2외국어(4학점), 철학개론(2학점), 문화사개설(2학점), 국민윤리(2학점), 체육(4학점), 교련(6학점)을 필수로 하고,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계열별 기본공통과목을 14~31학점 이수하게 하고 있다.(강무섭, 1976, 69~78)

이 시기 교양교육과정은 이처럼 교양교육을 위한 여건을 법적으로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내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외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교육의 내용이 교양교육의 본령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④항에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선택하여 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초학문분야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전공기초교육을 위한 것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학문분야별 개론 중심의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교양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국책교양’의 필수화를 통한 교양학점의 확대와 같이 ‘타율적 성장’에 의존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양교육은 결국 이 시기 그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하던 교양교육 전담조직마저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불운을 맞이하고 만다.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와 연세대학교 교양과정부가 폐지된 것이 1975년과 1976년이였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8, 72~76; 정혜령, 1999, 72~80)

3.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1980~1993)

- 7·30 교육개혁과 졸업정원제, 그리고 자율화의 단초

1979년 12·12 쿠데타로 들어선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30일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7·30 교육개혁 조치’로 불리는 이 방안은 제5공화국 시대 교육의 혼선과 무리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대학입학 본고사의 폐지, 과외 금지, 대학 졸업정원제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30 교육개혁 조치’는 교육학 이론이나 대학 교육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치였다. 본고사 폐지 후 도입한 학력고사 제도는 치열한 눈치작전과 미달사태로 대변되는 대학 입시의 혼란을 불러왔고,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에 따라 도입된 상대평가제도는 학생 간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었다.(김종철, 1988, 324~339)

1982년 4월 2일,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가 초래한 혼란과 대학의 불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 간 중간기구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발족되었다. 대교협은 대학 간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정책연구기관과 정보센터로서, 그리고 정부의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황인철, 2006, 51~54) 대교협은 고등교육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제언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1987년 6·29 선언 직후에 있었던 「대학 자율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 제출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교부는 이를 대폭 수용하여 「대학자율화 세부실천계획」(1987. 9.25.)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 여기에는 ①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과 책임, ② 교수들의 참여폭 확대, ③ 교권의 신장과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④ 대학특성에 따른 자율화 추진, ⑤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사상교육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국민윤리」, 「한국사」, 「체육」, 「교련」 등 ‘국책 과목의 폐지 및 자율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문제의 ‘국책교양’은 결국 1989년 「교육법시행령」 개정(1989.2.28.)과 함께 폐지되었다.(안기성, 1994, 175;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8, 110~112; 김정인, 2018, 263~265)

또한 제5공화국 시기에는 1980년까지 시행되던 실험대학의 140학점 체제가 모든 대학에 확대 적용되었다. 그와 함께 그동안 일반교양교과, 전공교과, 선택교과의 3원 체제로 이루어졌던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 전공의 이원구조로 바뀌었으며,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은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두어 이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김종철, 1988, 215) 이처럼 교양교육과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이수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었으나,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제5공화국 후반부에 제기되었던 「대학자율화 세부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주력하였다. ‘국책교양’의 폐지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학자율화’는 그 실천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1990학년도에 적용된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 개편 결과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989년 ‘교양교육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교양교육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19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였는데, 이 개선 방안은 각 단과대학으로 하여금 교양필수 과목 및 이수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결국 교양교육의 전공 종속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양교육과정이 각 단과대학에 위임됨에 따라 학과 중심주의로 흘러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교양 교과목을 지정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이 박탈당하였을 뿐 아니라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기초과정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고 확산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편적이어야 할 교양교육이 지나치게 전문화되고 말았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8, 110~114)

‘국책교양’의 폐지에 따라 교양교육을 위한 터전이 마련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양교육의 내실을 다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대학 내 권력구조 내지 역학관계는 결국 단과대학의 이해관계에 대학 교육의 운명을 맡김으로써 중국에는 대학 교육의 심각한 왜곡, 교양교육의 표류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것은 대학 내에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그 필요성을 옹호하고 실천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4. 김영삼 정부(1993~1998)

- 5·31 교육개혁과 대학 자율화, 그리고 학부제

대학 자율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김영삼 정부 들어서부터였다. 자율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그에 앞선 1995년 2월 28일,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③항 ‘일반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전체 과목의 30%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 조항의 삭제는 대학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부정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타율적 성장’의 한계를 역사적 유산으로 지니고 있었던 한국 대학에 있어 ‘자율화’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었다. 그러나 1990년 서울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편 사례처럼,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의도치 않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지속되었다.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부재와 교양교육에 대한 오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일반교양과목 학점 배정 기준의 삭제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③항의 삭제 전후의 대학 교육과정 편성 학점을 비교한 결과, 교양 학점은 10% 정도 감소하였다.(박창언, 2002, 85-86) ‘국책교양’이 폐지되면서 전공교육의 식민지가 되었던 교양은 이제 그 구차한 삶의 터전조차 잃어버리고 비좁은 외판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정부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5·31 교육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이 방안은 ‘자율화’, ‘분권화’,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모집 단위 광역화를 전제로 한 ‘학부제’가 ‘학문 영역이 통합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부응’, ‘교육과정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폐쇄적인 학과 운영으로 인한 졸업자의 취업 기회 제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체계 확립’ 등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1995년 도입되었다.

학부제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으나, 학부제의 도입 여부나 정도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전공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의 강의부담을 줄여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며, 교육 및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위로부터의 개혁,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강제적인 학과 통폐합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신양균, 1996, 17-23 ; 오인택, 1996, 87-95 ; 신양균, 1998, 85-88) 그에 따라 학문 분야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로 이해되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어야 할 학부제는 슬한 논란과 시행착오 끝에 2009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4. 김대중 정부 이후(1998~현재)

- 학부대학과 정부재정지원사업, 그리고 교양교육 정상화 노력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학 자율화 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⁶⁾ 「대학 자율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국책교양」의 폐지를 이끌어냈던 대교협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대교협이 설립된 1982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도부터는 「학문분야평가인정제」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 실시된 교양교육 분야 평가는 교

6) 194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48년 간 교육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교육법」이 38회에 걸친 개정으로 인해 그 체계와 내용 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 12월 13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김갑석,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법체계의 정비에 대학 교양교육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육목표, 교육과정, 교수, 수업 및 평가,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여건, 개선 노력 및 발전계획 등 6개 영역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3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65개 4년제 대학에 대한 교양교육 분야 평가 결과, 최우수 대학 5개교, 우수대학 62개교, 보통 93개교, 개선 요망 4개교, 불인정 5개교, 판정 유보 12개교가 발표되었고, 6개 영역별 우수대학이 선정되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전공교육을 우선시하는 대학이 상당수 있었고, 졸업생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교양 교과를 다수 개설하거나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었으며, 전체 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교양강좌의 60% 이상을 시간강사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교양 교과목 강좌당 학생수가 59.79명으로 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보다 많아 강좌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였으며, 전공과정 교육은 각 전공에 의해 비교적 책임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교양교육과정은 교육 주체가 불확실하였고 교양교육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 22-60)

대교협의 교양교육 분야 평가는 4년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평가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교양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 이후 교양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또한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이 시기 각 대학에서 태동하였다. 1999년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이 출범하였다. 학문의 융합과 통섭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을 사명으로 출범한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은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1년간 Residential College를 운영하는 등 교양교육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였다. 2005년에는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이 출범하면서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천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고, 2011년에는 뛰어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을 목표로 내세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출범하면서 중핵교과를 새롭게 개발 운영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였다. 국립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가 2002년에 기초교육원을 출범시키면서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학부대학으로 독립함으로써 교양교육의 기획과 운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대학 교양교육 역사상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⁷⁾

2006년 10월에는 교양교육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교양교육학회가 출범하였다. 교양교육 관련 최초의 전국 학회인 한국교양교육학회는 출범 이듬해인 2007년부터 매년 2회의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교양교육연구』를 정기적으로 간행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이 학문적 체계 위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교양포럼과 창파강좌(Blue Waves Lecture Series)를 개최하여 한국·일본·중국·대만 등 동아시아 교양교육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숙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일우, 2020, 16-20)

한편 이 시기에는 교양교육이 각종 대학 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새롭게 강조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 Advancement in College Education) 사업」은 평가지표 가운데 교양교육 지표의 점수를 전공교육 지표의 점수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교양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였다. 이 사업은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대학 홍보에 큰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각 대학은 사업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체계를 갖추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변기용, 2015·2017)

7) 이같은 변화는 2014년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H-LAC)의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최병문 외, 2017)

그리고 2011년 대교협 산하에 설치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이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도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2011년 7월 1일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출범한 교기원은 ‘교양교육 연구개발 사업’, ‘교양교육 컨설팅 사업’, ‘교양교육 개선 지원 사업’, ‘교양교육 인식 제고 사업’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민경찬, 2019, 8~14; 홍성기 외, 2020, 3~88) 특히 교양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손동현, 2012; 박주호, 2013; 유기용, 2014) 이를 토대로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교기원은 명실공히 ‘National Center’로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 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하여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포획됨으로써 대학 교육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김민정, 2019, 328~342)

뿐만 아니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구조개혁,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교양교육의 토대를 새롭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발적 연대와 노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경성제국대학 예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역사

는 근 100년에 이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고등교육은 억압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일제 강점기의 고등교육 정책과 개방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이었던 미군정기의 고등교육 정책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교육은 일본이나 미국의 교육 이념이나 체제를 이식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비로소 우리의 손으로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커다란 혼란과 역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폐허가 된 터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대학을 통제하고 육성함으로써, 한국의 고등교육은 ‘타율적 성장’에 길들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같은 ‘타율적 성장’에 의존해 온 한국의 대학은 교양교육 자체의 목적이나 의의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하기보다는 교양교육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이 편만한 상황에서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교양교육을 형식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에 따라 교양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교육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그런가 하면 ‘국책교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교양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장되기도 하였으며, 교양교육은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물론 1970년대 실험대학이나 1990년대 학부제와 같이 대학 교육을 혁신하고자 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교양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또 그것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탓에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다행히 1999년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출범 이후 대학마다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게 되었고, 한국교양교육학회가 발족하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립되면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그동안의 타율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율적 성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지난 한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배제와 차별, 개방과 자유방임, 법률주의, 통제와 육성, 자율화 등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의 교

체 속에서 순탄치 않은 굴곡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양교육은 전공의 교양 잡식이나 기초과학·수학(BSM) 교육의 실종,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낮은 위상, 비정년트랙 계약제 교수제도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윤우섭·홍석민·홍성기, 2019)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구조개혁,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등 고등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교양교육의 토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자율적 성장’에 의존해 왔던 지난 100년의 역사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역사는 ‘자율적 성장’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등교육 정책은 교양교육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양교육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교양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의 구축, 교양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및 지원제도의 정비 등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이 이와 같은 방향에서 수립, 시행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양교육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숙, 2002,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무섭, 1976, 「대학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945~1975)」,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석, 2019, 「교육법 체계에서의 ‘교육기본법’의 역할과 위상」, 『교육법학연구』 31-2, 대한교육법학회, 1-16.
- 김민정, 2019, 「역량담론의 헤게모니와 대학교양교육의 방향」, 『문화와 융합』 41-5, 한국문화융합학회, 321-348.
- 김정인, 2018,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휴머니스트.
- 김종철, 1975,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역사적 전개(1945~1975)」, 『교육대학원 논문집』 2,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8-36.
- 김종철, 1988,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성혜, 2000, 「한국의 1970년대 실험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경찬, 2019,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설립과 비전」, 『두루내』 33, 한국교양기초교육원, 8-14.
- 박일우, 2020, 「<한국교양교육학회>의 조직과 비전」, 『두루내』 36, 한국교양기초교육원, 16-20.
- 박주호, 2013,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Ⅱ)」,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박창언, 2002, 「학부제 실시에 따른 교양 교육 과정의 변화」, 『교육학논총』 22-2, 우리교육학회, 77-97.
- 변기용, 2009, 「대학 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대안-5·31교육개혁 이후의 시장적 대학 자율화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6-1, 한국교육정치학회, 135-164.
- 변기용, 2015·2017, 『잘 가르치는 대학의 성공 요인 1·2』, 학지사.
- 서남수, 2010,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한국교양교육학회, 1-18.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8,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동현, 2012,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손홍숙·한태동, 1999, 「학부제의 도입과 대학교육과정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9-3, 한국교육사회학회, 105-133.
- 신양균, 1996, 「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대학교육』 7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7-23.
- 신양균, 1998, 「학부제를 다시 생각한다」, 『대학교육』 9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5-88.
- 아마노 이쿠오 지음, 박광현·정종현 옮김, 2017, 『제국대학』, 산치럼.
- 안기성, 1994, 「교육법제 100년과 고등교육법제」, 『고등교육연구』 6-2, 한국고등교육학회, 137-180.
- 안기성, 1999, 「교육법 체제의 변천사」, 『교육법학연구』 11, 대한교육법학회, 171-200.
- 오인탁, 1996, 「학부제의 배경과 의미」, 『대학교육』 8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7-95.
- 우마코시 토오루 지음, 한용진 옮김, 2000,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교육과학사.
- 유기웅, 2014,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윤우섭·홍석민·홍성기,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9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소규모용역보고서.
- 이광호, 1983, 「미 군정기 한국교육의 체제 형성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덕 외, 1967, 『대학교육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대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교육연구소.
- 이정옥, 2015, 「일본식 ‘교양교육’과 미국식 교양교육의 수용과정」, 『교양교육연구』 9-3, 한국교양교육학회, 11-39.
- 이충우·최종고, 2013, 『다시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 정태수, 1995, 「한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제도의 변천」, 『교육법학연구』 7, 대한교육법학회, 1-17.
- 정혜령, 1999, 「해방 이후 교양교육과정의 변화 경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병문 외, 2017,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최종철, 2007,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교양교육연구』 1-1, 한국교양

교육학회, 209-232.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1960,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 「2001년도 학문분야평가인정제 교양교육분야 종합보고서」, 평가보고 ER 제2001-245-1432호.

홍성기 외, 2020, 「대학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사업 설계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A Study on the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History of General Education in Korea

Yoon, Seungjoon
(Dankook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history of general education in Korea. The origin of general education is found in the preliminary course (豫科) of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學) in 1924, but it was actually only a preliminary course for major education. During the three-year period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U.S. Military regime introduced the category of “general education subjects (一般教養科目)”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emphasizing the spread of “general education” for the spread of individual freedom and democracy. Such measures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brought about the three-tier system for the Korean higher education in which general education as well as majors and electives played a most important ro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First Republic established the basic foundation for legal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enacting and promulgating the 「Education Act」(教育法)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教育法施行令).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in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s was based on state control and fostering. The “pilot college” (實驗大學) system introduced in 1973. And the Article 119, Paragraph ③ of the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Apr. 20, 1973) reinforced the purpose and position of general education. But the pilot college

system failed because the conditions were not mature. Unfortunately after that, general education lost its center and became adrift. In the period of the 5th Republic, the university curriculum was changed to a dual structure of “general education” and “major”, and required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were each required to be completed.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of the 6th Republic tried to implement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abolition of “national general education subjects”, but the delegation of general education to each college led to subordination of general education in majo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in full swing promoted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大學自律化), shaken the roots of general education by deleting Article 119, Paragraph ③ of the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in 1995. In addition, the academic divisional system (學部制)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5·31 Education Reform Plan” (5·31 教育改革) failed as it was understood as a compulsory means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departments for the structural reform of university.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has continued to this day, and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 is giving this momentum. In the process of moving to the 2000s, the institution dedicated to general education of each university, such as Yonsei University’s university college, was established,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韓國教養教育學會) and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韓國教養基礎教育院) were launched.

The general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ies, which has a history of nearly 100 years, had to undergo a lot of twists and turns in various higher education policies such as government control, fostering, and autonomy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but it is now slowly getting out of the long and long tunnel of darkness. We are entering a transition period

preparing for a new leap forward.

Keyword ● general educ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the history of general education, the Education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pilot college system, the autonomy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1. 11. 27. ▮ 심사완료일 : 2021. 12. 12. ▮ 게재확정일 : 2021. 12. 14.